



코로나19가 강제한 원격수업의 확산과 그에 따른 법률적 변화



☞ 박근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소장
✉ kpark9@kedi.re.kr



2020년 초부터 전 지구적인 위협으로 등장한 코로나19가 지난 1년 동안 인류에게 준 직접적인 피해는 말 그대로 '기록적'이다. 미국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온 지 1년만에 총 사망자 수가 2차 세계대전에서 숨진 미군 전사자의 수를 추월했고(『서울신문』 2021.01.21.),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평화 시기만을 고려한다면 최악의 역(逆)성장을 나타냈다(『헤럴드경제』 2021.01.27.). 이제 방송에서 관중이 꽂 들어찬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 장면을 보았다면 누구나 화면 속의 이벤트가 최근이 아닌 2020년 이전의 과거 시점에 이루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는 이유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바꿔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양식을 그토록 비약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껏 당연시되어온 사회적 회합(social gathering)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대면(untact)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 방식의 일상화(new normal)는 그동안 자유로웠던 우리의 행동과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켰다. 오늘날 사람들은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 대신 주거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식당과 카페의 공간을 이용하지 못해 테이크아웃(take-out)이나 배달 업체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처럼 기존에는 너무나 당연히 누려왔던 면대면 접촉을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성과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연쇄적인 변화를 강제한다. 더 나아가 축적된 개인의 정신적 불안정과 육체적 비활동성은 소비사회의 속성상 경기 침체와 직결되어 물질적 삶의 풍요로움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비대면 활동의 문제를 가장 먼저, 또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분야는 바로 '교육'이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에 관한 보도가 메인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2020년 2월, 당시 교육부가 결정해야 할 가장 어려운 사안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위해 등교를 허락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가치 부여가 남다른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생활은 대다수 국민에게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다. 학교란 학생들에겐

매일 아침 등교하여 일정 시간을 다른 학교 구성원들(e.g., 선생님, 친구들 등)과 함께 지내야만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며, 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제도로 이해된다. 그러한 학교에 학생들이 더 이상 등교하지 못한다면 여러 이유로 학교 교육이 절실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를 전제로 일상을 영위했던 많은 어른들의 삶이 위축될 수 있기에 감염증의 확산이라는 위중한 상황에도 선뜻 등교 개학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3월과 4월에 걸쳐 4번의 개학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이라는 생경한 교육지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 당국의 그와 같은 복잡한 상황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이란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대면 형태의 '원격수업'을 통해 학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교육 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원격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제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인한 우리 교육 분야의 주요 법률적(또는 제도적) 변화를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원격수업의 진행과 연관 지어 찾고자 한다.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원격수업과 관련해 법률적 보완이나 개선을 요구받아왔던 측면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는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 된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 일수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둘째는 원격수업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나타난 '교육 격차'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실 원격 수업(또는 원격 교육; distance education)은 코로나 19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각각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다. EBS 등 교육채널을 활용한 수능 관련 강좌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또는 사이버 대학의 인터넷 강의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OCW(Open Course Ware)나 MOOC(Massive Opne Online Course)의 경우 지식의 사회적 공유나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원격 교육의 일종이며, 반대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이나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주기 위한 e-school 등은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춘 원격수업의 형태이다.

2020년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전국적인 원격수업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나 물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양희준, 2020). 전국적인 규모의 원격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이쌍철 외, 2020). 첫째, 무엇보다도 원격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축적되어 있어야만 한다. 둘째, 완성된 콘텐츠를 개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ICT 인프라와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이 필요하다. 동시에 원격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법에 적합한 에듀테크(EduTech)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셋째, 기존 대면 수업과는 전적으로 다른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넷째, 원격 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지침(또는 기준)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진행된 원격수업을 교과 과점상 수업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급하게 결정하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e-학습터와 EBS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수업(EBS 온라인클래스)을 원격수업의 플랫폼으로 지정한 후,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이들 두 플랫폼의 인프라를 대폭(e-학습터 - 7배, EBS 온라인클래스 - 300배) 증설하였다(이쌍철 외, 2020). 동시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제시하여 수업의 유형을 (1) ZOOM과 같은 화상 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2) 학생은 녹화된 지정 강의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3) 교사가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4)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타 수업' 등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

들과 비교해서 성공적인 원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쌍철 외, 2020). 특히 기존 공공 플랫폼을 활용하여 단 시간 내에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플랫폼을 구축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해보면 최소한 온라인 개학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위에서 제시한 원격수업의 4가지 필요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 개학에 맞춰 단기간에 인프라를 확충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접속 지연, 업로드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바 있으며,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불안정성이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 수업 운영 지침이 미비했던 점은 아직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다(강성국 외, 2020).

지금까지 설명한 문제가 원격수업의 물적·구조적 차원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술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량도 주요한 보완 대상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원 역량강화 연수는 주로 면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 ICT 활용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 제작, 비대면 수업에서의 수업 진행, 학생들과의 소통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온라인 개학 초기 교육부는 원격수업 유형을 폭넓게 제시하면서 학교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수업 형태를 선택하도록 유도했지만, 교사들이 운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방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번에 해당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으며, 쌍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1)번 형태의 수업 비중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양희준, 2020).

끝으로 원격수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법률적 차원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규모 원격수업을 지원할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시행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업일수와 관련이 있다. 즉, 휴업일수가 35일인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추가적으로 감축하거나 여름

방학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양희준, 2020). 따라서 온라인 개학은 선택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화의 단계로 발전해갈 무렵, 원격수업과 관련된 새로운 관심사는 과연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에듀프레스』 2020.06.07).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듯이 원격 수업은 수업 진행 방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완벽하게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았다(『한겨레신문』 2021.01.20.). 기본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는 정규 수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수업의 분량이나 질에 관한 규정이 부재했다. 또한 활용된 콘텐츠 중에서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중·고등학교용 자료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KERIS나 EBS에서 제공한 콘텐츠는 교육과정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다수였다(이쌍철 외, 2020).

또한 법률상으로도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24조 ②항의 내용(“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은 주로 방송·중·고나 방송통신대학 등 방송 및 통신을 이용하는 특정 대상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특수한 사례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에듀프레스』 2020.06.07.).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서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격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뉴시스』 2020.08.29.). 하지만 여전히 2학기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수용하여 2020년 9월에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7개 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즉 [초·중등교육법] 제24조 ③항에 “학

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에듀프레스」 2020.09.24.).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강제한 원격수업의 확대와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문제점들은 마침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듯싶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격수업이 초래한 교육적 결과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원격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와 인력, 콘텐츠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는 주로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측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원격수업은 기존 대면 수업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에는 필연적으로 수업 참여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1년여에 걸친 원격수업의 결과로 오래전부터 주요한 교육문제로 인식되어 온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실제로 2020년 5월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하형)의 상·하위권 사이의 성적 격차가 2016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2020.06.09.). 또한 최근 실시된 거의 모든 학업성취도 관련 조사에서도 개학 연기나 원격수업의 여파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크게 저하된 반면, 상·하위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발의되어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2021.01.20.). 또한 서울시 의회의 경우에는 원격수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원격수업 진행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장애 및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격수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을 위한 원격수업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계속되는 시행착오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도 당분간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강성국·김상철·김수진·김은영·김은영·도재우·이은희·이은주·장혜승·정재원·조문주·황준성, 2020, 「코로나19 대응 국가 수준 원격교육체제 진단 및 과제」 이슈페이퍼 IP2020-02, 한국교육개발원.
- 경향신문, 2021, “코로나로 교육격차 심화…교육불평등 지표 개발해야”, 이성희, 2021/01/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01620001&code=940401)
- 서울신문, 2021, “미국 코로나 사망자, 2차 세계대전 미군 사망자 수 넘어”, 이보희, 2021/01/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1500035&wlog_tag3=daum)
- 양희준, 2020, “공교육, 왜 필요한가?», 「코로나 시대, 학교의 재탄생」 (김경애 외 지음:학이시습) 中, pp.1~14.
- 에듀프레스, 2020a, “코로나 원격수업 수업일수 인정 법적 근거 없다”, 장재훈, 2020/06/07.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529>)
- 에듀프레스, 2020b, “국회본회의 통과 교육법안,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 .. 학교밖 교육활동 정규수업 인정”, 김민정, 2020/09/24.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6285>)
- 오마이뉴스, 2020, “서울시의회, 안정적 원격수업 기반 마련 조례안 통과”, 정수희, 2020/12/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480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이데일리, 2020, “학평이 입증한 코로나禍 교육격차…부진학생 지원대책 마련해야”, 신중섭, 2020/06/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800080&mediaCodeNo=257>)
- 이성철·강성국·손찬희·장혜승·김정아, 2020, 「교육 분야 감염병 [COVID-19] 대응과제: 정규 수업 인정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IP2020-01, 한국교육개발원.
- 한겨레신문, 2021, “수업일수 채우기 바빴을 뿐, 학력 그 이상을 잃었다”, 최원형, 2021/01/20.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79512.html>)
- 헤럴드경제, 2021, “IMF 세계경제 성장률 작년 -3.5% 역주행…올해 백신효과로 5.5%로 소폭 상향”, 박세환, 2021/01/2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7000018>)